



## 첨단소재 R&D로 국가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 확충

- 「제1차 산업재산 정보 관리·활용 기본계획」, 「황당규제 개선방안」,  
「숙박시설 화재 안전관리대책」도 논의 -

- ▷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,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
- ▷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인 첨단소재에 기술 역량을 집중하여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고 전략사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「첨단소재 R&D 발전전략」 마련
  - 한 권한대행, “우리나라가 첨단소재 분야 핵심기술과 공급망 체계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관계부처는 본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”
  - 100대 첨단소재 발굴 및 지원, 첨단소재 기술 성과 확산 지원 체계 구축, AI 기반의 소재 연구 패러다임 혁신 등을 위한 기반 조성 등
- ▷ 산업재산 정보를 범정부적으로 활용하여 미래 기술 방향을 예측하고 경제 도약을 촉진하는 「산업재산 정보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」 마련
  - 한 권한대행, “각 부처는 산업재산 정보를 활발히 공유하고 민간과도 적극 협력하여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할 것”
  - 경제안보·R&D 등 산업재산 정보의 전략적 활용 분야 확대, 민간 산업재산 정보 서비스기업 육성, 산업재산 정보 분석 플랫폼 구축 등
- ▷ 제2차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 개최 결과 선정한 국민 생활 속 불편을 끼치는 낡은 규제와 그 조치 계획을 담은 「황당규제 개선방안」 발표
  - 한 권한대행, “각 부처는 선정된 규제 과제를 잘 검토하여 조치하고, 국민 눈높이에서 규제를 발굴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”
  - 40일간(‘24.8.4~9.12) 국민제안 공모·검토 결과 개선 과제 60건 선정
- ▷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앞두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숙박시설 소방 안전을 강화하는 「숙박시설 화재안전관리 대책」 마련
  - 한 권한대행, “올해 부천 화재 사고로부터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히 진단하고 속도감 있게 개선하여 국민께서 안전한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할 것”
  - 스프링클러 자율설치 유도, 숙박시설 안전정보 공개, 대국민 교육훈련 강화 등

□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19일(목) 오전,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(서울↔세종 영상회의)를 주재했다.

○ 이날 회의에서는 「첨단소재 R&D 발전전략」, 「제1차 산업재산 정보 관리·활용 기본계획」, 「황당규제 개선방안」, 「숙박시설 화재 안전관리대책」을 논의했다.

## < 안건 1. 첨단소재 R&D 발전전략 >

□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핵심이 되는 첨단소재 기술의 조기 선점을 위한 「첨단소재 R&D 발전전략」을 수립하였다.

○ 최근 조사 결과\*에 따르면, 첨단소재의 기술 수준이 미국, 일본에 이어, 중국도 우리를 추월\*\*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첨단소재의 기술력 저하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핵심 공급망의 위협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바,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였다.

\* 2024년 국가전략기술분야별 소재 전문가 델파이 조사 실시 (400명, '24년 10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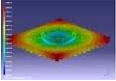
\*\* 기술수준 : 미국 100%, 일본 88%, 중국 87%, 한국 84% (전문가 델파이 조사, '24.10월)

○ ‘첨단소재 R&D 발전전략’에서 제시하는 중점 추진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### 1.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한 소재 R&D 고도화

○ 글로벌 공급망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①100대 첨단소재(5년 내외), ②100대 미래 소재(10년 이상)로 구분하는 Two-Track R&D 체계로 강화한다.

○ 우선, 특정 국가에 높은 대외 의존도 등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높은 ‘100대 첨단소재’를 발굴하고 향후 5년 내외로 조속한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사업화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.

100대 첨단소재 (향후 5년 내외)					
반도체 주권	▲공정기술 자립화 ▲고신뢰성 ▲열특성 제어 관련 → 총 20개		모빌리티 안전	▲배터리 안전성 ▲신소재 대체 ▲新 특성 구현 관련 → 총 23개	
바이오 자립	▲안정성 제고 ▲다기능 구현 ▲제조 신기술 관련 → 총 10개		제조 고도화	▲제조공정 스마트화 ▲고출력 ▲다기능 관련 → 총 18개	
에너지 안보	▲원료수급 안정 ▲장수명 제고 ▲친환경 공정 관련 → 총 19개		극한기술 확보	▲원소재 의존도 완화 ▲독자 제조 (수출통제 대응 등) 관련 → 총 10개	

○ 이와 함께, 10년 이상의 중장기 미래의 기술 혁신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심으로 ‘100대 미래소재’에 대한 R&D를 차질없이 지원하여 향후 10년 이후의 초격차 원천기술 확보도 병행해 나간다.

100大 미래소재 (향후 10년 내외)					
3大 게임 체인저 분야			산업 기반 분야		
AI 반도체	▲초고집적 ▲초고속·고전력 반도체 ▲AI 모델 개발 등 관련 → 총 14개		모빌리티·로봇	▲초연결(자율주행) ▲사용자 안전 ▲인간 친화 등 관련 → 총 17개	
첨단 바이오	▲재활·증강(난치성 질환) ▲디지털 치료 ▲예측·진단 등 관련 → 총 9개		ICT (이차전지, 통신, 디스플레이)	▲최고성능 ▲지속가능 ▲초실감 ▲폼팩터 혁신 등 관련 → 총 27개	
양자	▲오류 최소화 ▲고온 동작(컴퓨팅) ▲초고감도(센서) 등 관련 → 총 6개		우주·에너지	▲극한 환경 ▲제조 혁신 ▲수소 ▲무한 연료 등 관련 → 총 27개	

## 2. 첨단소재의 기술 성장 지원 강화

- 첨단소재 원천기술 성과가 다양한 분야로 활용·확산될 수 있도록 ‘첨단소재 기술 성장지원 체계’도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다.
- 먼저, ‘출연연’을 중심으로 ‘소재 분야 연구자’, ‘수요·공급기업’이 함께 참여하는 ‘(가칭)첨단소재 기술 성장 협의체’를 구성하여 우리나라 소재 원천기술의 현안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,
- 첨단소재 원천기술의 성장을 저해하는 기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원천기술 매칭·고도화, 스케일업 기술난제 해결 등을 지원하는 ‘첨단소재 원천기술 성장 R&D 프로그램’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.
- 특히, 원천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 기획 단계에서 기업의 참여를 높이고,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지적권 확보 지원, 부처 간 이어달리기 협력사업 등 소재 연구의 R&D 프로세스도 개선해 나간다.

## 3. 첨단 연구 지원을 위한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

- 최근, 새롭게 부상한 AI 활용 연구를 소재 연구에 도입하기 위한 ‘소재 연구 AI·데이터 생태계 플랫폼’의 기능을 보다 확대하고, 소재 전문가, AI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소재 연구 HUB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.
  - \* ▲초고속 컴퓨팅 자원 ▲고품질 데이터(총300만건) ▲소재 특화 AI 모델(20개 이상)
- 이외에도, 디지털 연구 방법론에 특화된 소재 연구 인력양성은 물론, 기업 현장의 신진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, 젊은 과학자가 글로벌 연구자와 협력하는 기회도 확대하는 사업(글로벌 영커넥트)을 추진한다.

- 정부는 이번에 수립한 「첨단소재 R&D 발전전략」 내 이행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.

## < 안건 2. 제1차 산업재산 정보 관리·활용 기본계획 >

- 정부는 특허데이터 등 산업재산 정보를 안보·R&D·산업 분야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「제1차 산업재산 정보 관리·활용 기본계획」을 본격 추진한다.
  -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 및 공급망 재편으로 기술이 안보와 결합하여 국가·기업의 생존 여부와 직결됨에 따라, 특정 분야의 기술·인력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산업재산 정보의 가치는 날로 높아지는 상황이다.
  - 이에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의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제도적 기반\*을 조성하고, 전략적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첫 번째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였다.

\* 「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정 및 시행('24.8)

### 1. 경제안보·R&D 등 산업재산 정보의 전략적 활용 분야 확대

- **경제안보 분야**에서 국가핵심기술 등 국가안보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기술의 보호를 위해 관련 특허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기관 간 공조\*를 강화하는 한편, 경제안보품목 등에 대한 특허데이터 분석으로 대체 공급처 등을 파악하여, 정부의 공급망 다변화 정책 수립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.
  - \* 14개 부처로 구성된 「범부처 기술유출 합동대응단」 출범('23.11~)으로 정부대응 일원화
- **기술개발 측면**에서는 국가전략기술 등의 정부 및 민간의 연구개발 방향 설정을 위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확대하고, 중복연구 방지 등 정부 R&D 전 주기에 걸친 투자 효율성 제고 및 국제 공동연구 분야에도 특허 빅데이터의 활용을 확대할 방침이다.

## 2. 산업재산 정보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

-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재산 정보서비스 기업에 창업부터 해외진출 단계까지 연구개발 및 투자·판로 개척 등 지원을 강화한다. 또한 양질의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, 산업재산 정보서비스 관련 바우처, 신고·사업실적 확인 등 신규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.

## 3. 분석플랫폼 등 산업재산 정보 분석·활용체계 마련

- 산업재산 정보의 범정부 활용 및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**인공지능(AI) 기반의 분석 플랫폼(시스템)을 개발**을 추진한다. 이에 따라 부처·기관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데이터에 근거한 객관적 정책 수립이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.
-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기본계획을 통해 국가 차원의 산업재산 정보 연계·활용 기반을 마련하고, 국가 산업경쟁력 제고와 역동경제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제 전반에 활용을 확대할 예정이다.

### < 안건 3. 황당규제 개선방안 >

- 황당규제 공모전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황당하거나 불편한 규제 또는 정책개선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면 정부가 검토하는 **국민 참여형 규제 혁신을 활성화**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였다.
- 올해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는 총 510건의 제안이 접수(8.4~9.12)되었고, △중복제안, △사적민원 등을 제외하고 250건에 대해 소관 부처별 검토 및 국조실 재검토를 거친 결과, 60건을 수용하여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였다.
- 수용된 제안 60건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우수제안 10건을 선정했고, 규제정보포털(www.better.go.kr)를 통해 국민 온라인 투표(12.4~12.11)를 거친 결과 총 3,473명이 참여하여 1위~10위까지 최종 순위를 확정했다.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## 1.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국민제안 투표결과

순위	제안과제(부처명)	시상내역
1위	<b>친정어머니가 '산후도우미'가 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허용 필요 (복지부)</b> * (현행) '산후도우미'와 산모가 민법상 가족 관계인 경우 서비스 제공 불가 → 생계를 달리하는 시어머니는 지원 가능 vs 친정어머니는 불가능 ('24.12월 개선 완료)	<b>대상</b> (국조실장상 + 100만원 상당 부상)
2위	<b>다자녀 가정에는 자녀 연령에 관계 없이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 부여 필요 (교육부)</b> * (현행) 다자녀 가정 자녀 중학교 우선배정 시 만18세 이상 자녀는 자녀 수에서 제외되어, 3자녀 가정의 경우 18세 이상 자녀가 있으면 나머지 자녀는 혜택을 받지 못함('24.10월 개선 완료)	<b>최우수상</b> (국조실장상 + 50만원 상당 부상)
3위	<b>잔액 사용이 편리해지도록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개선 필요 (중기부)</b> * (현행)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잔액보다 큰 금액의 물건 구입시, 잔액 사용이 불가능하고 등록된 신용·체크카드 등에서 전액 결제	<b>우수상</b> (국조실장상 + 30만원 상당 부상)
4위	<b>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카드로 봉투 구입 허용 필요 (여가부)</b> * (현행) 바우처카드로 생리용품 구입시 물건을 담을 수 있는 봉투 구입 불가	<b>장려상</b> (10만원 상당 부상)
5위	<b>중고교 농구선수의 불가피한 전학으로 인한 1년 출전금지 개선 (문체부)</b> * (현행) 농구부 정원 미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타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경우에도 1년간 출전금지 → 중고 농구연맹 '선수등록규정' 개정 필요	
6위	<b>먹는물도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표기 추진 (환경부)</b> * (현행) 식품은 소비기한 표시로 변경('23년 되었으나) 먹는물은 아직도 유통기한으로 표시	
7위	<b>공공기관의 군 복무기간 호봉 산정 불공평 개선 (보훈부)</b> * (현행) 각 공공기관마다 제대군인에 대한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달라서 불공평(1년 단위 vs 1개월 단위 등)	
8위	<b>지방자치단체 체육대회 의무 개최 법률규정 폐지 (문체부)</b> * (현행) 「국민체육진흥법」은 지자체별 1년에 1회 이상 체육대회 의무 개최 규정 존재	
9위	<b>사문화된 어업자원보호법상의 어업허가 규정 삭제 (해수부)</b> * (현행) 수산업법에 따라 실제 어업면허가 이루어지나, 법률적으로는 사문화된 어업자원보호법상 어업허가까지 받지 않고 불법조업중인 상황	
10위	<b>글램핑 및 카라반 야영장 텐트 설치공간 의무 규정 폐지 (문체부)</b> * (현행) 글램핑, 카라반 야영장까지 텐트 설치공간(15m <sup>2</sup> , 최소1곳) 마련이 의무 사항	

## 2. 우수제안(1위~3위) 주요 내용

- 먼저, 가장 많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대상(1위)에는 「친정어머니가 ‘산후도우미’가 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허용 필요」 제안이 선정되었다.
  - 현재는 산모가 출산 후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정부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때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,

민법 제779조(가족의 범위)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.

    1.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 자매
    2.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

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.
  - ‘시어머니’가 건강관리사 자격을 갖고 며느리를 돌보는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하면 민법상 가족이 아니어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, ‘친정어머니’는 산모의 직계혈족으로서 가족이 되어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황당하다는 제안이 제기되었다.
  - 소관 부처인 복지부는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,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정부 산후도우미가 민법상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올해 12월 관련 지침(산모·신생아건강관리 사업지침)을 개정 완료하였다.
- 최우수상(2위)에는 「다자녀 가정에는 자녀 연령에 관계 없이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 부여 필요」 제안이 선정되었다.
  - 세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아이가 만 18세 이상이면 자녀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나머지 자녀들이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나,
  - 소관 부처인 교육부는 그간 이와 관련된 지적이 지속 제기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자녀 나이에 상관없이 다자녀인 경우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10월 관련 법령(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)을 개정 완료하였다.
- 우수상(3위)에는 「잔액 사용이 편리해지도록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개선 필요」 제안이 선정되었다.

-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시 잔액보다 비싼 물건을 결제할 때 현재는 온누리상품권 잔액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구입한 물건가격 전액이 기존 온누리상품권 앱에 등록된 신용·체크카드로 결제되거나 계좌로부터 출금이 되어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.
  - 따라서, 남은 상품권 잔액 전부를 우선 사용하고 부족한 금액만큼만 별도 결제(복합결제)되도록 개선해달라는 제안이었다.
  - 소관 부처인 중기부는 현재 복합결제시스템 도입은 물리적으로 어려우나 대신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처럼 결제 시 부족한 금액을 먼저 자동충전 한 후 물건가격 전액이 결제되는 시스템을 내년에 구축하여 불편을 개선할 예정이다.
- 또한 이번 공모전에서 최종 우수제안 10건에는 선정되지 못했지만 많은 국민들의 불편을 개선할 기타 우수제안으로 「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방문 간호지시서 유효기간(180일) 내 재발급 허용», 「소방공무원 채용 제출서류 간소화(각 2통→1통)」 등의 제안도 전문가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.

**《 황당규제 공모전 시상 과제 외 기타 우수제안 》**

연번	과제명	부처명
1	<b>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(180일) 내 재발급 허용</b> * (현행) 의료기관 방문이 힘든 수급자의 방문간호지시서 재발급 신청은 수급자의 상태변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기일(180일)이 지나야 신청 가능	복지부
2	<b>소형선박 조종면허 발급 관련 불편 개선</b> * (현행) 5톤이상 25톤 미만의 동일한 선박 조종시 동력수상레저면허(해경청)를 취득 하더라도 소형선박조종사 한정면허(해수부)를 별도로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함	해수부
3	<b>소방공무원 채용 제출서류 간소화(각2통 → 1통)</b> * (현행) 일반 공무원 채용시 제출서류는 각 1부씩으로 바뀌었으나, 소방공무원은 아직도 각 2부씩 제출	소방청
4	<b>대학교 응시원서 사진규격 통일</b> * (현행)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수능응시원서 등 대부분 사진규격은 3.5x4.5cm인데, 상당수 대학교 응시원서 사진은 아직도 3x4cm를 적용	교육부
5	<b>청소년 후불교통카드 한도 상향</b> * (현행)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한도가 매월 5만원이라 청소년 본인이 직접 카드사에 전화해서 선출금을 납부해야 추가 이용 가능	금융위

- 국무조정실은 내년초에 민생규제 개선방안과 국민생활불편규제 개선 방안을 연이어 발표할 예정이다.

## < 안건 4. 숙박시설 화재 안전관리대책 >

□ 정부는 지난 8월 22일 발생한 경기 부천 숙박시설 화재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고,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「숙박시설 화재 안전관리 대책」을 마련했다.

○ 숙박시설 화재 안전관리대책은 ▲예방제도(9개), ▲현장대응(3개), ▲장비 개선(3개), ▲상황관리(3개), ▲교육훈련(2개) 5개 전략 20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, 소방청을 중심으로 6개 부처\*가 대책 수립에 참여했다.

\* 소방청, 행안부, 복지부, 문체부, 산업부, 금융위 및 시도, 민간전문가 참여('24.8.29.~11.8. / 10주)

### 1. 숙박시설 안전기준 강화

□ 숙박시설의 소방안전 강화를 위해 예방·제도 등 안전기준을 강화한다.

○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자율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, 금융위원회와 협업하여 스프링클러 설치 시 지방세 감면, 화재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고,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기록표에 스프링클러 설치 유무를 공개한다.

○ 완강기 설치기준도 강화하여, 객실 수용인원이 모두 탈출할수 있도록 완강기를 설치하도록 하고, 완강기 거치대도 사용자의 하중을 고려하도록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.

○ 또한,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하여 전기안전관리를 강화한다.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아크차단기 신뢰성 확보를 위한 R&D를 추진 중인데, 숙박시설에 대한 아크차단기 설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의무화를 검토할 계획이다.

○ 숙박업소 객실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방화문 안내표지를 부착하고, 방연테이프를 객실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등 보건복지부와도 협업한다.

## 2. 현장 실효성을 높인 대응체계 개선

- 먼저,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소방서장 등이 소방활동자료조사 대상과 횡수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, 소방용수, 출동거리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정보 위주로 소방활동자료조사 항목을 개선하는 등 현장활동 여건을 반영해 소방활동자료조사 체계를 개선한다.
- 또한, 특수차량 활동공간 및 소방 통행로 확보를 위해 경량 사다리차 등 특수차량을 활용해 진입 뿐만 아니라, 실제 소방활동이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강화하고, 소방차량 진입불가 지역 개선을 위해 지자체, 경찰 등이 참여하는 「긴급자동차 출동환경 개선 협의회」 운영을 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확대한다.
- 아울러, 상황별 구조대응 절차를 규정한 「고층건물 인명구조 대응절차」를 신설하고, 지침서를 마련하는 등 고층건물 인명구조 현장대응 매뉴얼을 정비한다.

## 3. 첨단장비 개발 및 소방장비 관리체계 강화

- R&D 등을 통해 첨단장비를 개발하고 소방장비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한다.
- 공기안전매트의 뒤집힘 등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, 단기적으로는 필요시 매트를 고정할 수 있도록 걸착용 고리를 부착하고, 중장기적으로 신소재 등을 활용해 충격 흡수력 등을 강화한 추락사고 안전대응 장비 개발을 추진한다.
- 또한, 내용연수가 1년 이상 경과한 공기안전매트는 폐기하고, 소방장비 최대 사용기간 지정 기준을 마련해 소방장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

## 4. 상황관리체계 개선

- 재난에 대한 상황관리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개선한다.

- 주요 사고에 대해서는 상황관제를 전담하는 팀을 두어 신고접수와 상황 관리가 전문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,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청에서도 재난현장 영상을 열람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지자체 CCTV를 연계한다.
- 또한, 추가 신고접수 내용 등 실시간으로 현장정보를 파악하여 신속히 출동대에 전파하는 등 지휘기능 보조를 강화하고, 신고자가 고립된 경우 대피요령과 피난기구 사용방법을 영상통화나 사진을 전송해 피난을 유도할 계획이다.

## 5. 소방공무원 및 대국민 교육훈련 강화

- 소방공무원과 대국민 교육훈련을 강화해, 위험에 대한 상시대비태세를 확립한다.
  -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숙박시설 인명구조 상시훈련을 강화한다. 낙하지점 유도방법 등을 수록한 ‘공기안전매트 장비 조작’표준교재를 보급하고, 공기안전매트 현지 적응훈련 비중을 확대하는 등 교육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.
  - 또한, 대국민 완강기 사용방법 홍보 등을 위해 숙박플랫폼과 협력해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하고, 피난기구 사용법 등에 대해 표준화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‘국민안전교육 표준실무’를 개정한다.
- 정부는 「숙박시설 화재 안전관리대책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주기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관리해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	책임자	팀 장 이희갑 (044-200-2056)
		담당자	서기관 이영승 (044-200-2535)
담당 부서 <첨단소재>	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 윤미란 (044-200-2248)
		담당자	사무관 김희선 (044-200-2213)
<공동>	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노소재기술팀	책임자	팀 장 이대길 (044-202-4570)
		담당자	사무관 이차연 (044-202-4574)
담당 부서 <산업재산정보>	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 윤미란 (044-200-2248)
		담당자	사무관 박지한 (044-200-2226)
<공동>	특허청 산업재산정보정책과	책임자	과 장 최일승 (042-481-5460)
		담당자	사무관 이수한 (042-481-5205)
담당 부서 <항당규제>	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 김성규 (044-200-2563)
		담당자	사무관 신부섭 (044-200-2559)
담당 부서 <숙박시설>	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	책임자	팀 장 이인중 (044-200-2683)
		담당자	주무관 박상조 (044-200-2361)
<공동>	소방청 대응총괄과	책임자	과 장 김용수 (044-205-2560)
		담당자	소방령 강윤구 (044-205-2561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
**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**

